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이 대형참사로 만들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에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태원 참사에 이어) 다시 드러냈다.

7월 15일 미호강이 범람해 오송 지하차도 옆 임시 제방이 무너졌다. 그 물이 지하차도로 순식간에 유입돼, 지하차도 안에 있던 차량들(탑승자들)이 빠져나올 틈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참사 발생은 오전 8시 40분경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미호강 범람 위험 최초 신고는 오전 4시 57분이었고, 문제의 지하차도 침수 위험(교통 통제를 해 달라) 신고는 오전 7시 58분이었다. 사고 차량 중 747번 버스는 원 노선이 통제되고 있어서 참사가 난 도로로 방향을 틀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일대에서 이미 비상 조처들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뜻으로 참사를 막을 시간이 충분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충북도와 청주시는 물론 경찰도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늘고 있는 오인 출동을 했다고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너진 제방은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쌓은 임시 제방이었다. 이 제방의 높이가 낮아 범람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있었는데, 관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한 달 전 안전 진단을 내렸다.

누구든 몇 명이 차량 통제 표지판을 들고 나가 지하차도 양쪽에서 차량 진입만 막았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경찰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룬 대가로 참사가 된 것이다.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들인 충북도지사(김영환), 청주시장(이범석), 행복청장(이상래)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에



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을 감쌌듯이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정의당 등은 오송 참사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래야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에게도 책임 있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 지원을 약속하느라 귀국이 늦어져, 뒤늦게 수해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꼼꼼하게 보고를 받고 지시도 했다고 했다. 그런데 귀국 직후 경상북도 예천군(산사태 14명 사망)을 방문해서 윤석열은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주택 뒤에 있는 산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것으로 생각했지, 몇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올 정도로 이런 건 저도 살면서 처음 봤다" 하고 말했다.

관심이 없으니 보고도 부실·부정확했던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지시를 내렸을 리도 없다.

윤석열의 관심사가 서방 제국주의에 편승해 한국 지배계급의 이득을 챙기는 데 있었으니 정부 전체가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직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수해 대처에는 건설노조 수사처럼 '특진'도 없었다.

이 와중에 구명조끼도 없이 경북 예천 산사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 사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당시 그 천은 해병대의 수륙양용장갑차도 물살이 세서 투입이 유보되고 있었

다.) 정부의 재난 대비 실패의 책임을 만회하려고 윤석열 귀국 이후 무리하게 사병들을 동원하다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수해 복구에도 긴축 재정 적용하려는 윤석열

윤석열은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수해 지원에 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복되는) 재난 대응 실패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과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혹시라도 백지화된 일명 '김건희 로드'(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약 1.8조 원)을 수해 복구에 쓰자는 것인가. 대통령 처가게이트 의혹이야말로 진정한 "이권 카르텔"일 테니 말이다.

윤석열의 지시는 수해 복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초래한 이 참극 앞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긴축 재정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수해 복구 추경 예산은 아깝고, 서방 제국주의의 전쟁에 군사 지원을 하고 후쿠시마 핵오염 수 안전 광고를 하는 돈은 아깝지 않다.

결국 윤석열의 수해 복구 지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으로, 수해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또다시 수해가 덮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농경지 수해 피해가 이후 식료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텐데, 정부의 신자유주의 긴축 기조는 생계비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재난이고 재앙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미국 핵무기의 한국 정례 배치는 주변국들의 핵 경쟁을 자극할 뿐이다

7월 18일 한미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 개막과 동시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에 왔다.

이 회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보장 차원에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그러니 전략핵잠수함은 일부러 이 회의에 맞춰서 한반도에 온 것이다.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42년 만의 일이다.

이 잠수함 1척이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 버릴 수준”의 핵전력을 갖고 있다.(한국군 관계자 발언)

핵협의그룹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전략핵잠수함이 부산에 온 것은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한미 두 정부는 핵무장을 한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함을 확인했고, 미국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논의 내용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나토식 핵공유’처럼 미 핵탄두가 한국 공군 기지에 고정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만이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의 합의대로 미국 핵무기가 전보다 더 빈번하게 한국에 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불안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동해

19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들은 평양에서 미군 잠수함이 들어온 부산까지의 거리만큼 날아갔다. 즉, 핵협의그룹



과 전략핵잠수함 전개를 겨냥한 무력 시위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핵무기의 한국 배치는 한반도 주변의 제국주의적 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다.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제국주의적 경쟁에서 핵무기가 다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핵전력 격차를 줄이려고 핵탄두 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자국이 중국과 러시아 ‘두 핵 대국’에 맞서고 있다며, 핵능력을 확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영국·호주와 손잡고 새로운 동맹인 오키스(AUKUS)를 결성하며,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 확산을 부추기

는 셈이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커트 캠벨은 오키스에 관심 있는 다양한 국가와 대화 중이라며, 오키스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미국 핵무기의 정례적인 한국 배치는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 핵전력 전진 배치를 강화하는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변국들을 자극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

미군 전략핵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올 때,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대규모 연합 훈련에 돌입했다. 이는 명백히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다. 러시아 대잠 구축함을 동원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연합 훈련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견제할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직후, 7월 16일 한미일 3국은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벌였다.

결국 동해상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힘겨루기가 매우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 때부터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를 주장해 왔던 윤석열은 이번에 미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에 승선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

그러나 미국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당장 동해상의 긴장 고조는 윤석열의 선택이 핵무장 강대국들의 경쟁 부추기에 일조하고, 한국을 그 경쟁에 더 깊이 휘말리게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 구독
- ☆ 좋아요
-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아랍계 프랑스 좌파 활동가 초청 강연

반란의 프랑스

파업, 소요, 이후 저항의 과제

7월 26일(수) 오후 8시

발제 **자드 부하를**

프랑스 혁명적 좌파 단체 ‘계급 독립성’ 회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 bit.ly/0726-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